

“전북 아이 미래기본펀드 도입하겠다”

‘도지사 출마’ 민주 안호영 의원, 출생아 미래 자산 형성 지원 공약 발표... 출생아 10년간 1000만원 적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출생아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장기 자산을 형성해 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추진하겠다”며 “2026년 7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간 적립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북 역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출생아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아이들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전북 아이 미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아이 미래펀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펀드는 전북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이름으로 장기 투자형 개인 계좌를 개설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하는 방식이다.

10년 동안 총 1,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며 장기 투자 수익이 더해져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실질적인 출발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도 지원금과 합쳐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복리 효과와 투자 수익이 더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의 출산 장려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렀다”며 “아이를 키우는 일은 20년, 30년에 걸친 장기 과정인 만큼 단기 지원이 아닌 미래 자산 형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아이 미래 펀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에 대한 투자 정책”이라며 “부모의 자산 격차와 아이들의 출생선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에게 투자하는 전북, 젊은 가족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전북을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이 한 명이 전북의 미래”라며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전북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와의 질의응답 중 재원 마련과 관련한 질문에서 도내에서 현재 7,100여 명의 출생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른 예산을 줄이고 각종 출산 유치를 위해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합동 간부회의를 갖고 있다.

“지선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안정적 행정 운영을”

김관영 도지사, 간부회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타운홀미팅·현대차 투자 협약 후속 조치 등 주요 도정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공직기강 확립과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강조하며,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먼저 김 지사는 최근 타운홀미팅과 현대차 투자 협약과 관련해 “대통령의 전북 전략과제에 대한 명확한 지원 의지를 확인했고, 산업투자와 국가 정책이 맞물려 우리 도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인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 실행과 정책 연계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을 명확히 설정해 책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투자 협약은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AI 제조혁신·데이

터·그린수소를 연결하는 전북 미래 산업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각 실국이 대통령 지시 사항과 중앙부처 검토 사항, 도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현 가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각 부처 공모사업들과 관련해 “한병도 원내대표와 각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복무 기강 확립, 누수 없는 도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오해 소지가 있는 언행을 금지하고, 선거기간 중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 행정 운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생·안전·경제 등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유의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만호기자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기업 선정”

국토부, 차량 공급 등 체계 하나로 묶여 자율주행 기업 기술 개발 집중도록 지원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제조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참여기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를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차량,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은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시판차량을 역설계해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차량의 정밀 제어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구역 등에서 서비스하면서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부담도 기술개발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협력모델은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차



량 공급, 전용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모델을 운영하면서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였으며, 공모 접수 결과 3개 분야에 총 11개 기업(자동차 1개사, 보험 5개사, 운송플랫폼 5개사)이 참여했다.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자동차제조사에 현대자동차, 보험사에 삼성화재, 운송플랫폼사에 현대자동차가 각각 최종 선정됐다.

자동차제조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전용차량(SIV)을 개발·공급

하고, 차량 정비 및 개발 인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주행 기업의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API)와 고속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차량 상태 모니터링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도 추진한다.

보험사로 선정된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규모의 보상한도를 제시,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안정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 및 고객창구를 운영하여 보험가입부터 사고 대응·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사고예방 컨설팅, IT 보안 컨설팅 등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운송플랫폼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

는 자율주행 차량과 플랫폼간 연동을 통해 차량 관계,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차량 센서 및 상태 데이터 기반으로 옛지 케이스 자동 수집, 운행 품질 분석, 차량 관계 지원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협력모델 참여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업 지원방안 논의에 착수하고, 4월 말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도 협력모델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기술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 국장은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며 “차량·시스템·서비스·보험이 결합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대표 K-자율주행 협력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기자

강성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택시 대란 책임, 전주시에”



진보당 소속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역 일대 택시 승강장 혼잡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의 단일한 행정이 ‘택시 대란’을 초래했다며 조속한 교통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강 후보는 전주역이 역사 증축 공사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임시 택시 승강장의 심각한 병목현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데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택시 대란의 책임이 전주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통위원회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철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주역사 증축 사업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전주시 간 위·수탁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사업비 부담 및 유지관리 책임은 전주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는 “전주시는 즉각 예산을 투입해 설계에 반영된 4차선 출구 확충 공사를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현역 시장 20% 감점 결정 이해하기 어렵다”

나인권 김제시장 예비후보

김제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인권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가 정성주 현 김제시장에게 20% 감점을 적용해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나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이자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결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성주 시장의 과거 폭력 전과 두 건도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임기 중 8,000여민원내 뇌물수수 의혹과 가족의 성형외과 시술비 대납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성형외과 시술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병원 진료비 전산데이터 존재하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 개인 비서처럼 동원했다는 배우자 의견 논란도 잠깐이 아니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20% 감점을 적용해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 과정의 공



나인권 김제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정 시장의 최후에 인사가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지난 2월 27일 새민금에서 열린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 당시 공심위원과 찍은 사진을 정 시장이 SNS에 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공직자의 사법리스크는 일반 사람과 다르다”며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

로 삼아야 할 공직자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엇을 기준으로 20% 감점을 적용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직평가 하위 20% 때문인지, 과거 전과 때문인지, 현재 제기된 의혹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민약 이러한 의혹들이 선거 기간 중 사실로 드러나거나 당선 이후 사업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 공백이 우려된다”며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시민 현재 낭비와 민주당에 대한 시민 신뢰 훼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예비후보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가 김제시민과 도민의 눈높이에서 철정한 후보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관위원회는 지난 8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 적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에 대해서는 20% 감점을 적용해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만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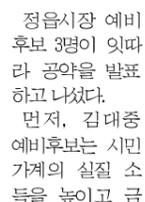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정읍시장 예비후보 3명, 공약 발표 잇따라

김대중, 농지연금 플러스·민생 금융 심폐 소생 등 발표

안수용, 농촌 유휴지 활용 수익형 사업 통해 시민에 배당

이상길, 에너지 사업 수익 배당 ‘정읍형 기본소득도시’ 제시



김대중

안수용

이상길

정읍시장 예비후보 3명이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고 나섰다.

먼저, 김대중 예비후보는 시민이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한 ‘민생경제 3대 정책’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읍의 대전환은 시민의 지갑이 두툼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농지연금 플러스 △민생 금융 심폐 소생 △청년 동지 패키지 등 민생경제 정책을 공개했다.

안수용 예비후보는 농촌 유휴지를 활용한 수익형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배당하는 ‘농촌 유휴지 소득화 프로젝트(정읍 시민연금제)’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유휴지 집단화 및 공공자산화 △태양광 발전 및 스마트팜·특화작물 단지 조성 △농촌체험·치유농업 결합 모델 구축 △가칭 정읍도시·농촌자산공사 설립을 통한 통합 수익 관리 등이다.

이상길 예비후보도 에너지·비에너지 분야의 사업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

하는 ‘정읍형 기본소득도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태양광 등 에너지 사업과 공공주차장, 관광, 유류시설 임대 등 비에너지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정읍도시기본소득공사’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사 설립 비용과 사업 운영 예산 등 초기 비용은 국비 40%/도비 30%/시비 30%로 나누어 투입하는데,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의 국·도·시비 투입 기준을 준용하여 확보할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는 태양광 10MW 기준으로, 연 순수익 약 20억 원 규모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여기에 비에너지 수익사업을 더해 안정적인 배당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정읍=김대환기자

모노레일 문제 해결 원칙 제시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9일, 남원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원시 재정 현황과 대규모 민간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특히 춘천테마파크의 모노레일 사업이 남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안전성 검증 △사실성 재검토 △재정순실 최



남원=김기두기자

소화 △민간운영 방식 검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시설물 소유권 확보와 민간 운영사 유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